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 실천 확실히”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 위한 적극 소통·도민 체감 예산 우선 순위 배치 등 당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22일 간부회의에서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의 확실한 실천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집중하는 명절대책을 수립했고 그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면서, “서민경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민간 공사대금 지급과 임금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교통대책·생활쓰레기 수거·음급의료 등 추석명절 기간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실행을 철저히 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 청원이 현안 해결에 노고



등 컨디션 조절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10월이 특별자치도 관련 부처와 국회 의견이 정리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북의 미래를 담

은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펼치고 시군의 협조 하에 범도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특별자치도 성공 열망을 잘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교부세가 감소되는 등 범국가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이므로, 전 실국이 비싼 각오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우선 순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14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4대 특구와 관련해서도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대응 관련 TF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점검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중기부 신디지탈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과 관련해 전북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삼성 제조혁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우리 도에 소재한 기업에 최대한 수혜자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2일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민생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주 모래내 시장 찾아 민생현장 살피

임상규 행정부지사 “상인·고객 모두 걱정 없는 명절 지원할 것”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맞이 민생현장점검을 추진했다.

이날 임 부지사는 모래내시장 전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사업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을 점검했다.

또한 도 기업유치지원실 직원들과 함께 명절 제수물품과 농축수산물 구매하고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 이동을 당부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북도는 명절종합대책에 따라 도민 분들이 편안하게 소중한 분들과 두터운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추석명절을 맞아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8일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집중한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2023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미래전략 포럼’ 개최

군산시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 기능 정립을 통한 ONE-PORT 전략 구축이라는 주제로 2023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항·신항 One-Port 전략 구축·특화방안 논의



군산시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 기능 정립을 통한 ONE-PORT 전략 구축이라는 주제로 2023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사)해운항만기술단체협의회와 (사)한국해운물류학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해운·항만·물류 관련 9개 학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군산항과 신항 One-Port 전략’과 ‘군산새만금신항 탄소중립 항만전략’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군산항과 신항 One-Port 전략’ 발제를 맡은 김형태 KMI 명예연구위원은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해 인근 항만과의 통합전략이 오늘날 국제적·세계적 조류이며 매패지 분쟁 조정 당국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신항 매패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대해 중분위, 대법원, 헌법재판

소 기준을 인용해 군산항과 신항의 행정체계 단일화 영향을 분석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신항 탄소중립 항만 전략’ 발제를 맡은 성결대학교 정태원 교수는 군산항과의 선의의 경쟁과 상생협력을 위한 군산새만금신항의 특성화 전략으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소항만 조성을 주장했다.

특히 세션3에서는 (사)한국해운항만 학술단체협의회 한종길 회장이 좌장으로 참석해 해운·항만·물류 관련 7개 학회의 학회장들이 군산항과 신항의 상호 보완성과 특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제언·토론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재검토되고 새만금 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될 시기에 군산항과 신항의 간접과 경쟁을 최소화하여 신항의 본격적인 개발 및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는 안되며 상생과 화합을 통해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도,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점검 강화

추석 전 공공수역 인근·민원다발시설 대상, 도·시군 합동점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분뇨 과소·과대 배출능가 등 감시

전북도가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나섰다.

전북도는 9월 5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귀향객의 생활환경을 위해 공공수역 인근 시설, 민원다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인접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가축분뇨 정화처리수 검사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전자인계관리 시

스템을 활용한 점검도 강화하여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과 함께 전자인계시스템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육두수를 통한 예상 분뇨배출량 대비 등록된 분뇨배출량이 적거나 많은 농가를 추출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8월 현재까지 170개 농가를 선별·141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개 농가 대상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위와 같은 농가들을 점검해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과정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최재훈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금과 같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 등 약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도와 시·군들은 대면점검뿐 아니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로 도민과 방문객의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새만금유역 수질오염 예방에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설명회 개최

공직자·군의회 300여명 대상

고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공직자와 고창군의회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에 앞서 공직자 역량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특별법 개정 등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정, 행정 정비 등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

을 가졌다.

전라북도 이지형 자치제도과장은 전북특별법 개정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법안의 핵심인 각종 특례 조항들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개정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노형수 부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북도와 고창군이 더욱 공고히 협력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 외국인지원정책 우수

중앙부처·지자체 정책 담당자 워크숍서 높은 평가 받아

익산글로벌문화관이 21~22일 진행된 제3회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 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 외국인지원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 시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된 외국인지원정책 사례로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세계문화전시·체험 복합 문화시설로 결혼이민자에게 다문화해설사 및 글로벌식당 운영을 통한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 기반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공고 제2023-1920호

군산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변경) 및 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기반시설부담계획(변경) 수립 열람공고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에 따라 군산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변경) 및 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기반시설부담계획(변경)(안)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67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6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산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변경) 및 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기반시설부담계획(변경)(안) 수립 내용 : 붙임 (열람장소 비치)
2. 열람기간 : 공고 게시일로부터 20일간
3.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 관계도서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변경) 및 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기반시설 부담계획(변경)(안) 수립 도서 (열람장소 비치)
5. 관계도면 : 계획생략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군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